

# ‘일하는 노년’ 고령노동, 동상이몽... “정년연장” vs “재고용”

8월 60대 이상 취업자수 30.4만 ↑ ...고령층이 취업률 견인 한국노총 “10년 후 65세에 국민연금 받아...정년과 맞춰야” 경총 “60세 정년도입 후 조기퇴직 증가...연장이 능사 아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60대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는 ‘고령노동’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쟁점은 달라 추후 적잖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0만 4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0만3000명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사실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취업률이 둔화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60대 이상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21만 4000명으로 전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으로 ‘일하는 노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은 2016년(법 개정은 2013년) 한 차례 연장된 뒤 8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법정정년을 넘겨 은퇴하기보다 일을 이어가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령노동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함께 해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65세 정년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해 국회 상임위원회 부의 기준인 5만명을 달성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OECD 중 연금개

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며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계속 뒤로 늦춰지면서 최대 3~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연금 소득만으로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4일 ‘정년 60세 폐지와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세로의 법 개정이 이뤄진 2013년에 비해 4.8%포인트, 고용률은 4.3%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령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 65.6%보다 낮았다. 또 임시·일용직 비중이 27.7%, 자영업자가 31.7% 등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013년 대비 지난해 조기퇴직자 증가율은 76.2%로, 정년퇴직자 증가율인 46.3%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년연

장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경총은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에 정년 연장 혜택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경총이 인용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자료를 보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473만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247만원이었다. 평균 근속연수 역시 전자는 13년인 반면 후자는 4.3년에 그쳤다. 또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령자 고용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로 자연스럽게 기업이 고령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 안보다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고령층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5월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금속노련 망루농성 강제 진압 사건 이후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기업도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이 추진한 65세 정년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운동이 국회 상임위원회 부의 기준인 5만명을 넘겼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이 청원안은 소관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된다. 청원 시작 당시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하반기 정책 과제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경사노위 논의와는 관계 없다”면서 “청원이 끝나고 국회가 논의에 착수하면 우리도 의견을 내고 의제 자체가 공론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1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사회가 너무 갈등적이고, 여러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대화로 풀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재개에 정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대화를 거부하거나 싫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변용일 기자

## 소상공인, 내달부터 가스요금 4개월 나눠 납부

도시가스 분할납부 내년 3월까지 적용

최근 연이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질 소상공인을 위한 도시 가스요금 분할납부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달부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다음달 고지서에 청구되는 이달 사용분부터 나눠낼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내면 된다. 이번에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때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은 모두 매달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 대부분이 포함돼 67만 곳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20만 곳에서 사용하는 업무난방용이 모두 포함된다. 해당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 확인 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

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겨울철 가스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에너지 취약층의 요금 부담이 커진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국 시도와 34개 도시가스 업체,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 제일건설, 광주 첨단3지구 ‘첨단 제일풍경채’ 지난 15일 견본주택 개관

첨단산업 기능 갖춘 자족형 신도시 ‘첨단3지구’ 내 2개 블록 2429세대 오는 25일 특별공급·26일 1순위·27일 2순위 청약 접수...중복청약 가능 유주택자 및 세대원 청약 가능, 거주지역 제한 無...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일건설이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공급하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15일(금)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이며, A2블록은 지하2층~20층, 24개동, 전용면적 59㎡~84㎡ 총1,845세대, A5블록은 지하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 116㎡~184㎡ 총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 59㎡ 소형부터 184㎡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분양일정은 9월 2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화) 1순위, 27일(수)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지는 A2블록은 10월 11일(수), A5블록은 10월 10일(화) 각각 발표되며, 계약은 10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

간 진행된다. 두 블록의 당첨자 발표 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적용됐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A2블록 전용 84㎡ 분양가는 3억 9600만원~4억 8800만원, 전용 59㎡는 2억8900만원~3억 5900만원으로 인근에 분양한 단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첨단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서는 9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오픈 3일간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라면 등 생필품을 증정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 전기밥솥과 에어프라이어 등 100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첨단 제일풍경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인근 아파트들과 비교해볼 때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고객 이벤트도 준비한 만큼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첨단 제일풍경채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계약 고액이 입주 전까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자녀 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선욱 기자

## 소·돼지고기 가격 전년보다 하락

농식품부, 명절 물가 부담 완화 축산물 수급·가격 안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충남 천안시 축산물 공판장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추석 성수기 축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석을 2주 앞둔 16일 기준 축산물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이다. 물가 상승폭이 컸던 작년은 물론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고기는 1+등급 등김 100g 기준 1만1098원으로 전년(1만2559원)보다 하락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 기준 2684원으로 전년(2839원)보다 싸다. 닭은 육계 1kg 기준 6057원으로 전년(6569원)보다 올랐지만 계란은 특란 한판(30구) 기준 6406원으로 전년(6644원)보다 내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소는 평시대비 1.7배 많은 2만4000t, 돼지는 1.2배 많은 6만2000t, 닭고기 1.3배 많은 1만6000t, 계란 1.2배 많은 1000t 등이다. 축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활용, 한우 구이류와 정육류, 한돈 삼겹살·목살 등을 20~50% 내외 할인 지원한다. 유통업체와 협력해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했다.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 물량을 3만t으로 두 배 늘려 추석 보름 전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축산물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현장의 노력과 할인행사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등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순천기업 84.8% 추석연휴 6일 이상 휴무·69% 상여금 지급

순천지역 기업 84.8%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을 포함 6일 이상 추석 연휴를 보낼 계획이고 69%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는 158개의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추석 연휴 기간과 상여금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4개 사(84.8%)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을 포함해 6일 이상 휴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69%는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할 계획이고, 17.7%의 기업은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 상여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기업도 1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금일봉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업이 54개사(34.2%)로 가장 많았다. 평균 지급액은 53만 3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만 3000여 원 감소한 수준이다. 선물 및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13개 사(8.2%)로 나타났다. 연봉제 실시 기업은 20개 사(12.7%)이며, 기본급의 20%~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2개 사(7.6%)로 집계됐다. 기본급의 51~100%를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9개 사(5.7%)로 조사됐으며, 기본급의 200%를 지급한다는 기업도 1개 사(0.6%)가 있었다. 순천상의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예년보다 휴무 기간은 다소 길어졌으나 상여금의 평균 지급액은 4%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가 급등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기업 채산성 악화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승호 기자